

정부, ‘참여·연대·혁신’ 지방자치 미래비전 제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주민주권 지방정부·동반자 관계 확립

국가균형발전 실현 등 3대 목표 발표

정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향후 30년을 이끌 새로운 지방자치 미래비전 ‘대한민국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 복합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를 토대로 마련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198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주민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확대됐다.

수도권은 지난 20년간 청년층 139만명을 포함해 총 96만명의 순유입이 발생해 혼잡·주거비 부담이 커졌고,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험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 강화된 것에 비해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사무비중은 국가 63.3%, 지방 36.7%, 세입 비중은 국가 74.7%, 지방 25.3%였으며, 주민투표 제도 도입 후 20년간 주민청구 투표는 3건에 그쳤다.

행안부가 제시한 미래비전은 크게 ▲주민 주권 지방정부 ▲중앙-지방 동반자 국정 운영 ▲

국가균형발전 실현 등 3대 목표로 구성됐다.

우선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

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하고 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포괄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3으로 조정하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의 회법 제정,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5대 초광역권 정책연합체 구성,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 구현, 인구·생활권 기반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차등지원 원칙을 확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지방 자치분권국가 실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마이크로그리드 구축·ESS 활용 등 방안 제시

주철현 ‘전남 재생에너지 토론회’ 성료

전력계통 포화…재생에너지 1번지 무색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지난 18일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전력 계통 확충과 연결의 길’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남의 전력망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한국전력·산업계·지역 주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주철현 의원과 함께 김원이·조계원·권향엽·문금주·김문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본부·전남도·한국전력공사가 후원했다. 전남 재생에너지 업계와 관련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방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남은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1번지임에도 전력망 포화 문제로 생산한 전기를 보낼 길이 막혀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전남의 전력 계통

포화 해소는 농어가 소득 증진, 농어촌 소멸 방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지역 대선 공약인 ‘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력망 확충과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기술·제도적 해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소규모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 계통 연계 전략’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경운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장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과 ADMS(지능형 배전운영시스템)를 통한 분산자원 최적 제어,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피크 억제와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등을 설명하며 “전남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마련되면 한전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는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송전선을 공동 이용하는 ‘출력상한 공동접속 설비’ 도입을 통해 동일 선로에서 최대 5배 이상 접속 용량을 확대할 수 있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병행

해배전망 차원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신안·태백·새만금 등 국내 현장에서 검증된 ‘햇빛·바람 소득’ 주민참여 사례를 소개한 뒤 주민·도민이 채권·펀드·지분 형태로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 송전선로·에너지 인프라 인근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계통소득’ 개념, 전력망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이익공유 제도화를 제안했다.

차준민 대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기후에너지환경본부·전남도·한국전력·재생에너지업계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전남을 재생에너지 1번지를 넘어 ‘에너지·디지털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전남 재생에너지·송전망·데이터 센터·AI 컴퓨팅센터를 연계한 종합 전략 수립, 전력망 투자와 ESS·분산자원 활용을 결합한 단계적 계통 확충 로드맵 마련,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의 법제화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진수 기자

광주 학교 이스포츠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김나운 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광주지역 학교 현장에서 이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나운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최근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 활동을 넘어 청소년 문화와 스포츠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건전하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이스포츠 정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이스포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 선수, 학생 이스포츠부지도자, 학교 밖 이스포츠시설 사 용료 등 학교 이스포츠부 훈련비, 이스포츠 관련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학생 선수 중 특수학생이 있을 때는 특수학생의 원활한 훈련과 대회 참여를 위해 우선 지원하도록 했으며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변은진 기자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

광주시는 19일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19일까지 5개 자치구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교육기관, 공공청사, 의료기관, 게임제공업소, 청소년활동시설, 음식점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법정 금연시설은 1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 시 법적 제정 금연구역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은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원호
220603-중-139779